

대선승리를 위한 경제살리기 대토론회

- 한나라당 무엇을 해야 하나?

- 일 시: 2007년 2월 1일 14시 00분 ~ 16시 50분
- 장 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 최: 국회의원 이상배 · (재)여의도연구소
- 후 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목 차>

□ 인사말

□ 개회사

□ 축 사

□ 주제발표 - I (이상빈 교수)

- 대내경제 활성화방안 및 경제정책 대선공약 ----- 1

□ 주제발표 - II (정인교 교수)

- 차기정부의 대외통상정책 주요이슈와 대응방안 ----- 25

□ 종합토론

○ 이혜훈 국회의원 (사회)

○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47

○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71

○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 77

○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 81

○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97

○ 박창규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109

□ 행 사 개 요

- 일 시 : 2007년 2월 1일(목) 14시 00분 ~ 16시 40분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 최 : 국회의원 이상배 · (재)여의도연구소
- 후 원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 개회사 : 이상배 국회의원
- 인사말 :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
- 축 사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

□ 토론회 내용

- <기조발제 - I> - 대내경제 활성화방안 및 경제정책 대선공약
(이상빈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기조발제 - II> - 차기정부의 대외통상정책 주요이슈와 대응방안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종합토론> - 사회 : 이혜훈 국회의원
 -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박창규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시 간

- 14시 00분~14시 30분 (30분) 개회행사
- 14시 30분~15시 00분 (30분) 주제발표
- 15시 00분~16시 30분 (90분) 종합토론
- 16시 30분~16시 40분 (10분) 질의응답
- 16시 40분 폐 회

< 인 사 말 >



임 태 희
여의도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임태희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대선승리를 위한 경제살리기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토론회를 준비하신 이상배 의원님,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은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업자와 빈곤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선진국 진입의 자신감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터널을 벗어나면, 희망의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여년 전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시작되던 무렵, 국민들은 민주화가 정치의 민주화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우리의 민주화가 정치적 민주화를 제고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그 동안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성장잠재력을 소진했고,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감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틀 속에서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통해 우리가 의지해왔던 이른바 ‘발전국가’ 모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국가모델을 만드는 일에만 나설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국가는 기업, 노동, 시민사회가 각각의 자율성, 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조정자적 역할을 하는 국가여야 합니다. 효율성, 경쟁성, 개방성이 사회 각 부문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되도록 사회와 정치질서를 유도하는 국가여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국가모델의 비전 제시를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사회의 통합과 공정한 경쟁의 유지, 비전 제시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데 모든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집중화된 권력을 휘두르며 사회와 경제를 지배하던 국가모델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탈권위, 탈집중화의 시대에 걸맞게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 노동, 시민사회 사이에 생산적이고 일하는 협력관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민간의 활력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도록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성장과 분배의 조화,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통해 각 경제주체 사이에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나라당은 정치권과 시장경제의 주체들 사이에 생산적이고 일하는 관계가 정립되도록 앞장 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산적인 관계의 구축을 통해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 상호신뢰와 존중의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 서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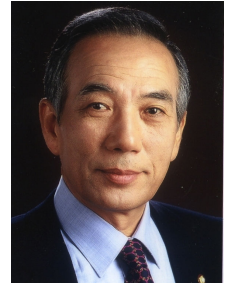
우리 한나라당이 이루고자 하는 선진화는 제도와 행위, 관계의 개혁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선진화는 사회의 각 주체들이 성숙된 의식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사회의 각 주체들이 균형잡히고 성숙된 의식을 추구하도록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정부는 자율과 책임 사이에서, 기업은 경쟁력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정치권은 운영능력과 대표능력 사이에서, 국민은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성숙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우리 한나라당은 ‘희망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바로 오늘 경제살리기 대토론회도 이러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에 대한 참석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희망 대한민국’을 위한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 회 사 >



이 상 배
국회의원

바쁘신 가운데에도 『대선승리를 위한 경제살리기 대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TV나 신문을 보면 대통령선거 이야기만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 걱정을 하면서도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하루 사납금 9만5천원을 채우지 못해 울상이고, 음식점들은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는 빈 상가가 늘어가고 있고, 남대문과 동대문시장을 가봐도 상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는 상인과 12시간을 서 있어도 “천원짜리 마수도 못했다”는 리어카 장수의 말 속에서 파탄 난 민생을 실감하게 됩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은 천만원씩 하는 등록금에도, 졸업은 하지 않고 학교를 맴돌고 있습니다. 고시학원에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로 넘쳐나고, 20:1의 환경미화원시험에 무거운 포대를 지고 달리는 고학력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비부부들은 치솟는 부동산가격 때문에 전세방을 구하기 어렵고, 평생 일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앞을 막습니다.

붉은 띠를 두른 노조는 거리로 뛰쳐나가고, 파업과 규제에 지친 기업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부동산 말고는 실패한 것이 없다는 자기변명과 남의 탓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개헌이다 남북정상회담이다 해서 정권연장에만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1년 내내 선거에만 매달리면 경제와 민생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지금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한나라당도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권교체세력으로서 민생정책을 하나씩 현실화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의 바램은 소박합니다. 배부르고 등따습고, 자식들 잘 키우는 일입니다.

비전2030이다, 반값아파트다,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인다 해서 말로만의, 귀로만의 이벤트성 선전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고 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학등록금 대출을 무이자로 하겠다.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겠다. 불법폭력시위는 엄벌하겠다”와 같은 바로 시행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현실적이고 실감나는 많은 민생경제 대책들이 개진되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귀한 시간을 내주신 발제자·토론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 사 >

김 형 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가 형편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 양쪽 다 실패했습니다. 참여정부 4년동안 평균경제성장률(4.2%)이 외환위기 직후의 경제성장률(4.4%)보다 저조합니다. 빈부격차가 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기업인들은 3년이 힘들고, 20년이 걱정이라고들 합니다.

요즘처럼 ‘희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때도 없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일이 ‘희망’을 되찾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꺼지느냐 아니면 다시 살아나느냐의 중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가야 합니다. 어설픈 정치논리가 개입해서 경제불안을 야기하고, 국민을 혼란시켜서는 안됩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우리경제는 경제전문가들의 냉정한 진단과 지도자의 추진력으로 이만큼 발전되어 왔습니다. 경제논리를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리더십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경제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많은 분석과 지적, 그리고 정책대안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지적과 대안이 바로 국민의 희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배의원님과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님, 토론사회를 맡으신 이해훈 의원님,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여섯분의 경제전문가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원 희 룡
前최고위원

30년 전 빌게이츠는 모든 가정에 1대 이상의 컴퓨터가 있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에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기 시작했고 30년이 지난 지금, 빌게이츠의 꿈은 지극히 당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도전정신으로 빌게이츠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그런 도전정신이 절실합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고 하는 용기가 절실합니다.

도전정신과 용기를 밑바탕으로 우리 한나라당은 고통 받는 서민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하기 위해, 그리고 개인과 가족이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꾸리게 하기 위해 많은 기회를 만들고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1월 말에 저는 다보스 포럼을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석학들과 정치지도자,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 걸친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광스럽게도 한국 측 정치인으로 유일하게 초대되어 다녀온 그 자리에서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끼리 싸우며 옳고 그른 것을 가르고 있을 동안, 세계는 이미 글로벌 흐름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우위

를 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을 시작한지 오래였습니다.

실례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은 정부 측에서 직접 대련의 밤을 주최하며 전 세계 지도자를 상대로 중국의 국가 브랜드 홍보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일본 스시 리셉션을 열어서 일본에 관심 있는 지도자를 초청해 긍정적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관련한 행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 글로벌 리더로 참석한 몇몇 참가자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빼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전 세계 국가를 향해 대한민국의 우수함을 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물 안을 벗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가안의 일에 매몰되어서 큰 변화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후의 변화, 인구의 변화,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의 성장,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 개인의 성장 등이 힘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힘의 변화 앞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문을 해봅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침체되어 있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지혜를 모으는 이 자리에서 저는 그런 자문이 많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변화하는 것을 잘 알고, 또 혁신을 통해 그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방법론을 토론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고견들과 지혜들이 모아져 나가는데, 저도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내경제 활성화방안 및 경제정책 대선공약

- 주제발표 I -

이상빈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대내경제 활성화방안 및 경제정책 대선공약

I. 문제의 제기

- 본고의 목적은 한나라당의 경제관련 대선공약의 도출을 위해 내수경기의 침체로 경제적 역동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음.
-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좌 내지 우로 또는 진보 내지 보수로 분류할 수 있으나 좌파적 시각이 반드시 진보적 시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음. 대략 미국의 공화당 정책을 보수 그리고 민주당 정책을 진보로 지칭하고 있으나 공화당 또는 민주당 경제정책 모두 우파적 경제정책으로 불리고 있음. 이런 의미에서 진보와 좌파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아니 됨. 본고에서는 진보적 우파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방향제시를 시도할 예정임.
- 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만 제고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제조업이 강한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제조업이 아무리 강해도 미국의 3차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산업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 일본은 금융·유통·건설 등 서비스 분야에서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세계경쟁에서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 예상됨.
- 대내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검토될 수 있으나 경제체질의 개선이라는 구조조정의 고통 없이 재정지출을 통한 단기부양책은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정 건전성의 악화만 초래할 개연성이 높음. 이런 의미에서 대내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부양과 구조개혁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지금 까지 성장을 강조한 경제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분배를 강조하는 경제정책이 현재 경제정책의 기조에 자리 잡고 있으나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이 오히려 분배를 악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 성장을 통한 분배 불균형 해소가 진정한 분배 불균형 개선이 되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분배 불균형 개선은 효과가 오래가지 못함.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영원히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방법임.
-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주도할 수 없고 부를 창출하는 기업의 투자 지출 증가로부터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됨. 반 기업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상위층을 공격하는 대중영합주의가 팽배하면 성장 동력이 침체되어 오히려 빈곤층의 확대만을 초래하는 양극화만 심해 짐.
-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대책을 보면 공급부족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금인상을 통한 수요억제책으로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음.
-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은 그 당시의 여건에 맞게 변천하여 왔지만 주변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경제문제에 접근하면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임.
- 3저 호황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기조로 돌아서자 경상수지가 적자를 달성하고 있을 때의 경제운용 방식과는 다른 접근법이 요구되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결과 흑자관리정책의 난맥상을 노출하였음.
- 준비 없는 세계화의 주창으로 초유의 국가부도사태를 초래하였음.

- 신용카드 사태에서 보듯이 소비지출 증가에 의한 경제 활성화는 지속적이지 못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함.
-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대내경제 활성화는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참여정부와 완전히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II. 한국 경제의 50년 발자취 : 오뚝이 경제

- 위기 뒤에 기회가 찾아오는 한국 경제 -
- 1948년에서 1961년까지
 - 해방이후 50년대는 농업위주 경제단계로 한국경제가 미국 원조로 지탱되었음.
 - 60년대 초에는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으로 자립경제수립을 지향하였음.
- 1962년에서 1972년까지
 - 60년대 중반 이후 70년대에는 수출지향 공업화 정책추진으로 선진국 따라잡기에 치중하였음. 이는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정부 주도 경제로 외환 확보를 위한 수출신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음. 60년대에는 수출가공업화를 70년 전후에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였음.
 - 제1차 5개년계획이 성공하는 1967년에 우리경제는 경제발전의 도약단계 (take-off)로 진입함.

- 1973년 제1차 경제위기

- 제1차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외환위기와 금융경색이 발생함.

- 제1차 경제위기 극복

- 사채를 정리하기 위한 8.3 긴급명령 조치로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시켜 경제를 회생시킴.

- 1977년

- 중동 붐과 중화학 투자 확대로 경기가 살아나고 경상수지도 흑자 유지하여 경기가 정점에 도달함.

- 1982년 제2차 경제위기

- 1979년 제 2차 오일쇼크의 여파와 세계적인 3고 현상으로 1982년에 5.7%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1983년에서 1984년 : 제 2차 경제위기 극복

- 김재익 청와대 경제 수석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시장경제 신봉자들이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압축 성장론에서 탈피하여 안정 성장을 추구함. 이로 인해 저물가 및 안정 성장을 이룩하여 제 2차 경제위기 극복함.
- 80년 대 이후에는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마지막으로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정부주도 경제의 한계를 노출하기 시작하였음. 즉 경제개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이가 이루

어지기 시작하였음. 다시 말해 정부의 역할이 자원배분에서 시장경제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제도개혁 또는 성장잠재력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이동하였음.

- 1987년

- 세계적인 3저 현상으로 경상수지가 대폭 흑자로 개선되어 외채 상황이 이루어졌고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짐.

- 1997년 제3차 외환유동성 위기

- 김영삼 정부는 ‘新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명제 등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세계화를 주창하였으나 임기 후반에 드러나기 시작한 구조적 취약점을 과감하게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임기 말 ‘외환위기’를 맞음
- 제3차 외환위기는 김영삼 정부의 단독실책이라기 보다는 그간 압축 성장에서 유래한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오다가 외환위기라는 형태로 표출된 측면도 있음.

- 1998년 제3차 외환위기 극복

- 1998년 외채협상 및 신뢰회복 등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조정에 진입함.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고성장의 뒷받침에 힘입어 한국경제가 회생함. 김대중 정부는 IMF의 도움을 받아서 4대 경제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중반 이후 개혁이 정체되고 벤처활성화 정책 실패 및 의료, 신용카드 대란으로 위기를 경험함.

- 노무현 정부는 진보적 개혁 정책은 초반부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양극화 심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실패로 임기 말에 정책 전반의 신뢰성 위기를 맞고 있음. 참여정부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확대를 주장하였으나 공공부문의 지나친 비대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켜 세계적 조류인 작은 정부 기조에 반하고 있음.

- 2007년 현재 제4차 경제위기 도래 (?)

- 현재 한국경제는 “가계 발 금융위기론” 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 보다 “저성장의 덫” 또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위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음. 즉 성장의 고통 없이 분배의 미덕만 강조하고 있어 기업가 정신 등 경제의 활력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큰 정부와 작은 시장으로 대변되는 축소지향의 경제구조로 변모하고 있음.
- 최근 원가공개 논쟁에서 보듯이 부동산문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재정부의 원가공개 반대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이를 ‘반 헌법적’, ‘민주주의의 위기’, ‘건축자본과의 결탁’ 등 반시장적 독설로 폄하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과연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함.
- 제 4차 경제위기(?)가 여타 경제 위기와 다른 점은 여타 위기는 외부의 세계경제여건으로부터 발생하였으나 작금의 경제 위기는 우리 내부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내부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위기라 이를 잘 감지하지 못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임.
- 현재 산업화 사회를 지나 지식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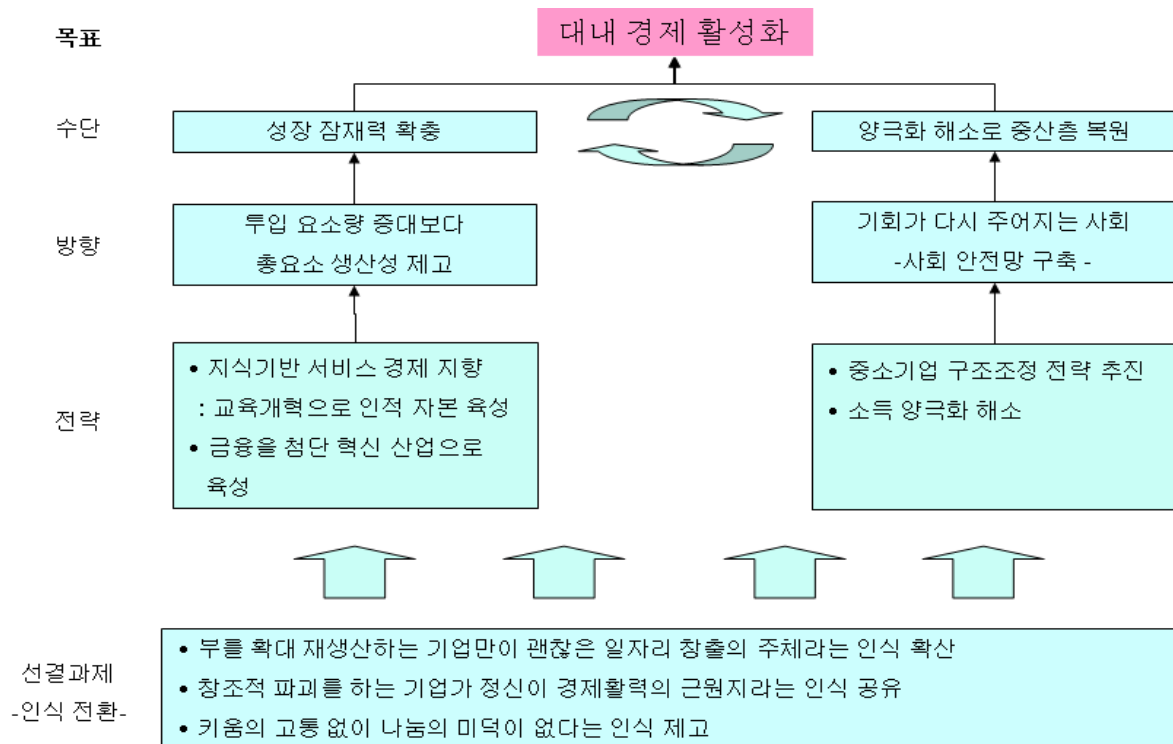
식정보사회에서 경제성장은 물적 자본의 양보다 인적자본의 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선이라는 생각이 우리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이상 향후 우리에게 전개될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우리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음. 이러한 교육에서의 평등추구는 경제성장을 몇 % 감소라는 문제 보다 더 심각한 위기의 원천이 됨.

- 오뚝이 경제의 시사점

-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국근대화’같이 국민들이 공감하는 목표가 정해지면 무서울 정도로 이를 빨리 달성하는 저력을 지니고 있음. 지도력이 있는 대통령이 출현하여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면 한국은 21세기에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은 연구개발비 지출이 GDP의 약 3%로 OECD 국가 중 5위, 정보통신기반은 3위, 인터넷보급률은 1위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2위 등 결코 미래를 낙담할 수 없는 저력을 지니고 있음.

Ⅲ. 대내경제의 활성화 대책

1. 대내경제 활성화 체계도



- 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 확충 및 양극화 해소로 중산층 복원이라는 수단이 필요함.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본 방향은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 및 자본 등 투입요소의 증대보다 노동 및 자본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임. 양극화 해소로 중산층 복원의 기본 방향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사회의 건설임. 즉 경쟁으로 승자와 패자가 갈리지만 패자는 영원한 패자가 아니고 다시 승자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져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건강한 사회가 형성됨.

-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 우리 보다 더 자본주의를 하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의 운영원리가 정말 자본주의에 충실하고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이 들 정도로 현재 경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음. 우리는 큰 정부보다 큰 시장을 원하고 있는 지?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주역은 복지재정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지? 민족 통일을 하루 바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제성장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을 하여 막대한 통일비용 지불에 대비하여야 하는 지? 등 우리의 기본시각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선결과제임. 이러한 사회적 합의 과정 도출에는 비전을 가진 지도자의 지도력이 중요한 역할을 함.

2. 지식기반 서비스경제 지향 : 교육제도개편 등 인적자본의 육성

- 한국은 지난 35년간 GDP가 연 평균 7% 씩 상승하는 등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투자와 성장이 저하하면서 연 평균 성장률이 5.5%까지 하락하고 있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면 2030년에는 성장률이 2.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족한 노동공급을 보완하기 위한 여성의 사회 참여율 제고, 투자지출의 증대를 위한 기업의 리스크 분산 방안 강구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 등이 거론 될 수 있음. 노동력이 제조업 부문에서 정부의 규제에 생산성이 저조한 서비스 부문으로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긴요함.
- 왜 한국의 성장률이 둔화하나?
 - 경제성장의 원천을 노동투입, 자본투입 그리고 기술혁신, 규모의 경제효과 및 기술적 효율성 개선으로 지칭되는 총 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으로 현재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노동 및 자본의 투입이 저조할 뿐 아니라 총 요소생산성의 저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한국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향후 노동공급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증가하지 않는 현 상황을 가정할 때 한국의 노동력은 2018년 이후 감소함.

□ 기업의 투자지출 감소요인

① 기술진보가 빠른 혁신산업 투자에 따른 투자위험이 증가하나 그룹 계열사 사이에 상호보증금지 등 위험분산장치의 미비로 기업들이 투자에 따른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②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경직화된 노동시장 하에서 기업의 신규투자가 불가피하게 축소됨.

③ 세계화에 따른 경쟁심화로 투자 수익성이 낮아졌고 더 나아가 경제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되어 투자수익률의 저하현상을 가속화시킴.

□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생산성 성장률도 80년 대비 하락함. 서비스 부문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56%에 불과하고 특히 도소매상, 호텔, 음식점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부문의 23%에 불과함. 전체산업에 대한 서비스의 기여도는 70년대 45%, 90년대 50%를 거쳐 2005년 현재 56%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한국경제가 점차 서비스 부문으로 변화하면서 전반적인 생산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현황 및 원인

가. 생산성 현황

· 한국의 서비스 부문 생산성은 세부 부문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금융, 보험, 부동산 부문의 생산성은 높은 반면 도소매, 호텔, 음식점 부문은 매우 낮음. 이와 같이 도소매, 호텔, 음식점은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서비스 부문 노동력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미국, 영국, 프랑스는 약 20% 수준임)

나.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원인

(1) 소매산업의 경우

- 한국의 소매 산업은 대형업자가 아닌 대부분 영세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생산성 저하
- 자영업을 대체할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 소규모 소매업자의 수가 증가
- 영역제한, 토지개발법 등 토지사용에 대한 규제로 대형매장의 확장이 어려움

(2) 소매산업 외의 경우

- 외국계 회계법인 설립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거주요건이 있음. 외국변호사의 경우 국내에 지점 또는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하나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등 외국자격에 대해 불인정
- 설립비용 과다. 신규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평균 22일, 약 \$2,000 불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과다한 설립비용은 새로운 회사의 시장진입을 저해함으로써 시장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킴
- 서비스부문의 기업들은 혁신비용이 많이 필요하나 설립 및 확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움. 유망한 신기술에 대해 지원 역할을 하는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부동산 등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으로 신용대출도 어려움 발굴설립비용 과다
- 대부분의 소매업자들은 신기술 도입 또는 훈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보다는 정부의 세제 지원 및 재무지원 그리고 대형매장에 대한 규제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개선 방향

- 한국의 금융부문은 규제완화로 인하여 생산성이 향상된 바 있으며 이는 다른 서비스부문에도 똑 같이 적용 가능. 호주의 경우 소매 산업에 대한 개방이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의 열쇠가 됨. 호주의 소매 부문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보였으나 산업합리화를 통해 경쟁유발, 대형매장 설립, 신기술 투자, 공급망 통합, 관리절차 개선 등 생산성이 향상되었음.
 - 한국에서도 일부 서비스 부문에서 규제완화가 진행 중이나 한국정부는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및 성장력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아울러 지식기반의 서비스 중심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형화, 특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여야 함.
 - 구체적으로 토지사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대형매장 설립 등 진입장벽 축소, 교육 부문의 경쟁 촉진을 통해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전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효율적인 파산제도를 마련하여 성장성이 없는 기업의 퇴출을 촉진,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서비스 부문의 혁신 유도, 무역자유화를 통한 서비스 부문의 규제완화 추진 등임.
 - 한국경제성장의 미래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동 변화를 위해 서비스 부문의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촉진될 수 있음.
-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은 지식의 축적여부에 달려 있고 지식의 축적은 고등교육 및 공교육의 충실여부에 의존함. 고등교육의 개혁은 대학의 자율성 확보가 시발점이 되어야 하며 공교육 개혁의 요체는 한

국 교육 현장 곳곳에 산재해 있는 평등의 잔재를 해소하는 것임. 이를 위해 평가시스템을 통해 무능한 교사와 유능한 교사의 차별적 대우, 교육과정개편 그리고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수월성 제고, 3불 정책 폐지 및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선발, 교육시장의 개방 등이 검토될 수 있음.

3. 금융을 첨단혁신산업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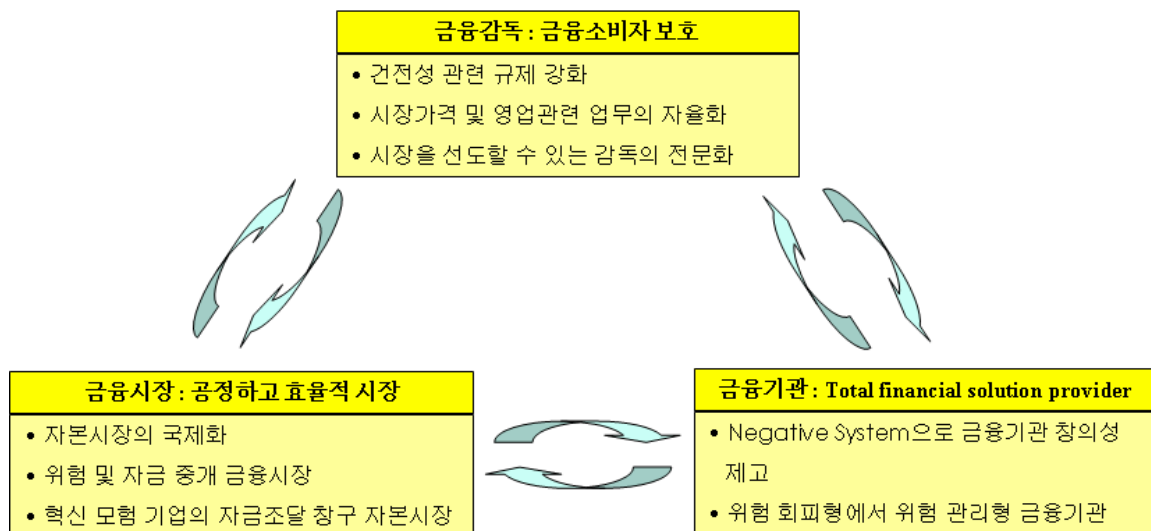
가. 한국금융의 현주소 및 문제점

- 각 금융기관별로 업무의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아 동질의 업무를 경쟁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즉 금융기관들은 Blue Ocean을 찾지 아니하고 Red Ocean에서 “제살 깎아 먹기”식의 경쟁을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금융의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의 원천이 되고 따라서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 IMF 금융위기 후 각 금융기관은 위험을 기피대상으로 삼아 위험에 대해 극히 몸을 사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작금에 정부보증과 재정예 의해 중소기업 금융이 운영되고 대기업의 대출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의 금융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 등 손 쉬운 가계부문으로 대부분 전환하였음. 금융기관은 자금중개(Flow of Fund)기능 뿐만 아니라 위험중개(Flow of Risk)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함. 따라서 위험을 무조건 청산 및 기피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말고 관리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함. 외세에 대한 채국정책이 대한제국의 몰락을 초래하였듯이 위험에 대한 채국정책이 금융한국의 부진을 야기하고 있음.
- 외국금융기관이 다수 한국에 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금융기관의 한국진출 시 우리가 기대했던 선진금융기법의 전수는 없었음. 현재 한국금융기관은 고부가가치 보다 저부가가치 금융 업무를 영

위하고 있어 21세 첨단지식산업인 금융업의 본질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즉 M&A 및 금융공학 등 첨단금융 업무는 외국의 투자은행에 의해 영위되고 있음.

- 우리의 문화적 배경은 금융한국으로 나아가는데 결코 호의적이지 않음. 제조업의 경우 젓가락 사용 문화가 반도체 산업 또는 생명공학에 유리하다고 하나 문화적 차이가 제조업의 육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그러나 금융은 위험을 먹고 사는 산업이고 따라서 금융업에서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나 위험관리는 문화 또는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하여야 정착되지 위험관리시스템 등을 구비한다고 위험관리가 정착되지 않음. 또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관행이 확립되어야 하며 판례에 의해 법체계가 확립되는 영미법 체계가 금융 산업에 유리하나 우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나. 금융개혁 모델 체계도



- “금융 강국 논의는 구호에 그치고 있는 일회성 사업이다”라는 현실론 또는 “한국의 여건 상 금융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이 있는 반면 “향후 한국의 차세대 혁신산업으로서의 위치를 금융업이 차지하여야 한다.”는 당위론 사이에 갈등현상 노정 되고 있

음. 그러나 금융 강국 논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매진하여야 함.

4. 중소기업 구조조정전략 추진

- 한국의 중소기업은 세계화와 그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향후 중소기업은 혁신과 경제성장의 원천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지식기반의 서비스 중심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 성장 동력산업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유연한 중소기업이 필요함. 또 중소기업 부문의 건전화는 한국서비스 산업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의 중요 부문으로 산업전체 고용의 87%를 차지하나 최근 급속한 세계화의 진행과 중국의 성장으로 대기업이 해외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의존이 감소하였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의 축소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생산과정의 글로벌 통합과 신기술의 이전 혜택에서 배제됨.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빈약한 재무구조는 중소기업의 성장 및 투자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중소기업 구조조정 전략

가. 구조조정을 위한 유인 강화

-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미흡한 이유는 은행은 중소기업의 높은 담보여신 비율과 구조조정 시 소요되는 고정비용으로 인해 구조조정에의 참여보다는 담보물 처분을 선호하였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고비용과 파산위험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임할 유인이 부족하였음.

(1) 공공신용보증의 규모 축소

-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는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채무불이행위험의 85%를 정부가 부담함에 따라 은행은 단지 15%의 위험만을 부담하였음. 따라서 보증비율을 국제적 수준인 60%대로 낮추어 은행이 차주인 중소기업의 상환능력을 정기적으로 감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신용보증기관의 상업적 운용 강화

- 신용보증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무수익여신의 회수가치 극대화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신용보증기관은 과거의 부실자산을 상각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

(3) 신용보증기관의 보유자산 매각에 민간부문 참여 유도

- 신용보증기관이 대규모 무수익여신을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시장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무수익여신 관리에 민간부문을 참여시킴으로써 회수율을 증가시키고 구조조정의 보완시장으로 조성하여야 함.

(4) 중소기업 부실채권시장의 육성

-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시장은 대기업 구조조정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민간시장도 구조조정 촉진에 도움이 됨. 다만 과거 외국펀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대기업 구조조정과는 달리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국내 PEF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5) 기업 도산을 구조조정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

- 기업 도산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구조조정하고 회생 불가능한 중소기업은 퇴출시키는 과정의 일환이므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수단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음.

나.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

- 부동산 중심의 대출관행을 탈피하여 리스크 평가에 초점을 둔 대출 확대 필요하고 벤처캐피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신설업체를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음.

(1) 담보대상 자산 범위의 확대를 위한 담보관련 법령 개선

- 법령상 부동산 이외의 자산 즉 미래현금흐름, 지적재산권 등의 담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은행은 이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갖게 됨.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담보관련법령을 적절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을 위한 위험평가 및 보험시장 구축

-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부재로 위험관리에 소홀하고 담보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음.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대출 또는 하위등급채권 등이 거래되는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유통시장의 설립을 통하여 자금조달의 다양화를 달성함과 동시에 위험평가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3) 중소기업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수집의 고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여신건전성을 분류할 때 대기업과 다른 기준을 적용함. 점진적으로 FLC(Forward Looking Criteria) 적용 여신액의 하한선을 낮추어 FLC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은행이 중소기업의 상환능력과 위험까지 조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4) 벤처 캐피탈 산업의 활성화

- 벤처캐피탈 산업이 혁신 신생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유도하기 때문에 벤처캐피탈 산업의 활성화는 중요함.

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 혁신형 신설업체의 발전은 한국이 지식기반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요소 중의 하나임. 이를 위해 부도기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폐지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등을 고려 할 수 있음.
- 한국경제가 제조업에서 선진기술 및 서비스 기반 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적이고 유연한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에 혁신과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중추 역할을 하여야 함. 그러나 한국의 중소기업은 현재 그 자체의 취약성,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위한 유인 강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 환경 육성 등이 필요함.

5. 소득양극화 해소로 중산층 복원

- OECD는 중간소득수준의 50% 내지 150%에 들어가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함.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 내지 2.5배인 계층을 중산층으

로 보기도 함. 1997년에는 중산층이 61.1%이었으나 2006년에는 53.4%로 감소하였음. 이는 OECD 회원국의 중산층의 평균비율인 71%에 미달하고 있음.

- 소득양극화는 중간층이 얇아지고 최상층 및 최하층의 비중이 커지는 즉 소득분포가 양 극단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지칭함. 한국의 경우 소득양극화(ER지수)가 소득불균형지수(지니계수)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임. 소득불균형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소득불균형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0년 간 아시아 모든 국가 중 소득 불균형이 가장 악화됨.
- 2005년 11월 10일자 매일경제는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판매와 생산격차가 사상최대로 벌어지는 등 경제 각 분야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고 있음. 더 나아가 매일경제는 지표경기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여전히 냉랭한 것도 양극화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에서도 보이고 있음. 이를 위해 전기기계, 정밀기계, 일반기계 및 비철금속의 네 가지 제조업에 비제조업인 정보·통신업을 포함한 ‘근대화 경제권’ 및 정보·통신업을 제외한 서비스 산업을 ‘포스트 근대화 경제권’이라고 하면 1993년 4/4분기를 기점으로 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시작되었음. 1993년 4/4분기에서 2004년 4/4분기 까지 ‘근대화 경제권’의 실질 GDP 성장률이 연 8.2%에 달한데 비해 ‘포스트 근대화 경제권’은 마이너스 0.4%를 보이고 있음.
-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요인, 경제 구조적 요인 그리고 경기요인으로 세분할 수 있음.

·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요인은 기술 발달로 미숙련자의 일자리

가 줄어드는 반면 숙련자의 생산성은 향상되어 숙련자의 소득이 상승하기 경우를 들 수 있음. 또 중국 등 생산원가가 낮은 국가와의 경쟁은 대체가 용이한 미숙련자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경제 구조적 요인으로는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정규직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불균형이 빠르게 진전되었음. 2002년 이후 정규직이 40만개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자영업 포함)은 180만개 증가하였음. 또 한국에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20% 내지 30%의 프리미엄을 갖는 반면 유럽 13개국의 경우 평균 15%의 프리미엄을 가짐.
- 마지막으로 경기 요인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 과다, 신용불량자 양산 등으로 가계의 소비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수요부진 및 과잉설비 등으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양극화 문제를 확대시켜 왔음.

- 소득양극화 해소 방안

양극화 해소 방안은 양극화가 발생한 원인별로 해소 방안이 나와야 함.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야기된 양극화는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통해 숙련노동자로 양성할 필요가 있고 경기요인에 의한 양극화는 잠재성장을 제고 등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 마지막으로 경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양극화는 정부의 규제 및 보호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어 야기된 양극화이기 때문에 정부의 온정주의적 보호에서 효율이 중시되는 시장 경제적 원리로 양극화의 해소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축소

한국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경직되어 있어 근로자를 대

량해고하기 어렵고 퇴직비용이 높음. 세계적으로 기술발전과 교역 증가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생산성이 낮은 원인이 되고 있음. 또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요인 중 정규직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들고 있는 만큼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축소함으로써 비정규직 대우를 제고할 필요가 있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축소는 정규직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 할 수 있음.

· 서비스 부문의 규제 완화

한국에서의 고용 불안은 제조업 부문에서 서비스 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에도 기인하고 있음.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의 대량 실직은 서비스 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가속화시켰음. 한국의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성장률은 2001년 기준 각각 11.3% 및 1.2%로 OECD 국가 중 그 차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이 제조업 부문의 정규직 붕괴를 상쇄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및 영세 자영업자를 양산하였음. 지나친 규제가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에서의 규제를 완화하여 점차 증가하는 서비스 업종에서의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함.

· 3대 취약 부문의 연착륙 유도

흔히 농업, 영세중소제조업 그리고 재래유통시장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3대 취약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들 부문은 정부의 보호막이 걷어지면 자생하기가 어려움 부문이고 그렇다고 하여 언제까지 정부의 보호 속에 안주할 수도 없음. 이들 3대 취약부문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농 같이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형화 전략과 경쟁력 있는 특수농작물 재배와 같이 전문화전략을 병행하면서 나아가야 함.

IV. 결론

- 본고는 대내경제 활성화라는 과정에서 고등교육제도 개편으로 인적 자본 육성을 통한 지식기반 서비스경제 지향, 금융을 첨단 혁신산업으로 육성,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 소득불균형 해소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한국경제는 공공 및 노동부문 개혁의 완수, 고령화 시대에 대한 연금제도의 개편, FTA 체결 등 무역자유화 대비, 재벌대책 등 산적한 경제 문제 해결에 직면해 있음.
- 압축 성장을 추진할 때의 경제운용 방식은 더 이상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적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문제는 시장 경제원리로 풀다는 전제하에 정치논리가 개입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정치적 지도력이 요구됨.
-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많지 않음. 이를 허비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라는 통일도 함께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경제에 매진하여야 함.

차기 정부의 대외 통상정책
-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 주제발표 Ⅱ -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프리젠테이션 - 정인교]

종 합 토 론

- 김정식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김종석 교수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 김정호 원장 (자유기업원)
- 김영배 상임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 곽창규 선임연구위원 (여의도연구소)
- 안순권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김정식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프리젠테이션 - 김정식]

정부개혁의 방향과 과제

-비만 정부 살 빼기-

김 중 석 교수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크고 효율적인 정부가 과연 가능한가?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민간부문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학술적 논쟁의 대상이 아닌 통계적 사실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든지 공공부문이 비대한 나라는 생산성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민간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정부규모는 큰 것이 좋고, 효율적으로 일만 잘하면 된다는 매우 그릇된 믿음과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 저하에 결정적 요인을 제공했다. 노무현 정부 취임 후 정부조직과 예산의 무절제한 팽창이 지속되어 정부조직이 방만해지고, 국민생활과 기업에 대한 간섭이 심화되었으며, 고위직 및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엽관제가 만연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었고, 국가경쟁력은 취약해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부문 종사자 수는 2002년 말 88만9993명에서 2006년에 94만8467명으로 증가하였고,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 106명이던 장차관급 공무원 숫자가 2005년 12월 현재 131명으로 증가했다. 정부 산하기관은 2001년 267개 기관에서 298개 기관으로 증가하였다. 노무현 정부 임기 중 정부규제의 숫자는 2003년 7,715건에서 2007년 1월 현재 8,083개로 증가했으며, 조세부담은 2002년 135.5조원(국민 일인당 284만원)에서 2006년 172.8조원(국민 일인당 356만원)으로 27.5% 증가했지만, 이 기간 동안 국민소득은 17% 증가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국

가부채는 133.6조원에서 2006년 279.9조원으로 109.9% 증가하였다.
소득은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소득은 시장에서 창출되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시장을 자유화하고 기업활동을 활성화하면 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공공부문이 경제활동과 자원배분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만큼 민간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정부조직 감축, 관치 계획경제 축소, 민간경제활동기회 확대

불필요한 정부조직과 공기업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축소하고, 민영화해서, 정부사업과 기능을 최대한 민간에게 이양하고 위탁경영(out-sourcing) 시킴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민간 부문에게 보다 많은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경제 요소요소에 자리 잡은 각종 관치경제 및 계획경제적 요소를 청산해야 한다.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자원배분의 주체는 시장기구가 아니라 정부관료조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경제에서 시장기능은 위축되고 정부기능은 비대해졌다.

지시, 통제, 적발, 처벌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정부규제수단을 보다 유연하고 민간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수단 또는 비규제적 정책수단으로 대체하고, 각종 조세 특례제도, 감면제도 등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공급과 배분과정이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다양한 고용기회와 일자리 형태가 시장에 존재하도록 해

야 한다. 그래야 여성인력과 은퇴인력이 경제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일자리는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단세포적인 발상이 실업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

정부의 살 빼기는 먼저 정부조직에 대한 과감한 수술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08년까지 공무원 정원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정무직 공무원의 숫자를 노무현 정부 이전 수준(106명)으로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는 각종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특히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

특히 정부조직을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자유화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제개혁을 주임무로 하는 부총리급의 가칭 ‘경제개혁원(ERB)’를 설치할 고려해야 한다. 경제개혁원의 주임무는 시장경제창달을 위한 각종 경제개혁으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편성기능, 정책조정기능, 정부개혁기능을 부여하여 현재 기획예산처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재정경제부의 정책조정기능을 이관하고 재정경제부는 ‘재무부’로 개칭하여 세제, 국고, 국제경제협력 기능에 전문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개혁, 공기업 개혁, 민영화, 재정개혁기능을 예산기능과 합침으로써 정책조정기능과 경제개혁기능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교통상부,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모든 정부부처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기능 재조정을 통해 정부조직의 슬림화와 정예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부처 조직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특정 산업이나 직종, 공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부처와 각 부처내 기구를 소비자, 수요자, 정책기능 중심의 조직구조로 개편하여, 경제정책이 특정 업종이나 산업의 이익보존이 아니라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형성되고 집행되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무부서와 생산자가 공급카르텔을 형성하여 이익 공동체화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예산 재정 개혁

정부예산 증가율과 세금 증가율을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입법화 해야 한다. 아무리 국가의 조세권이 정당하다고 해도 국민이 번 돈보다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며, 국민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기업 및 산하기관 개혁

잇을 만 하면 반복적으로 터져 나오는 공기업과 산하단체들의 방만한 경영사례와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문제는 결코 무능하거나 사명감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공조직의 본질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한국정부는 물론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예 경영권을 민간에게 넘기거나, 정부기능의 일부를 외부위탁(out sourcing)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러시아, 중국, 인도를 비롯한 구 사회주의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대한민국에서는 시대착오적인 정부가 1980년대 이후 정권과 정파를 넘어 일관되게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해오던 민영화와 공공부문 개혁을 중단하고, 오히려 공공부문의 영역확대와 공조직의 비대화라는 역주행을 감행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개혁 없이 국가경쟁력 향상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루 빨리 공기업과 산하단체, 공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구조조정, 민영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존치 필요성이 의문시되고 비효율성이 두드러진 정부투자기관(공기업) 및 산하기관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해야 한다. 민영화가 가능한 또는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기업 및 산하기관을 우선적으로 민영화하고, 위탁이 가능한 행정업무나 민간이 이미 담당할 수 있는 정부 기능은 대대적으로 민간에게 위탁 경영시킴으로써 정부 예산을 절약하고 민간에 소득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압력에 굴복하여 중단된 전력 및 가스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시장개방, 민영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

규제개혁

현존하는 중앙정부 부처의 약 8,000여개의 정부규제를 일정 기간 내에 4,000개로 줄이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규제를 비규제적 정책수단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불가피한 규제도 그 수단을 유연하고 친시장적인 수단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과도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경쟁상대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 입지규제, 투자관련 규제, 대기업규제 등은 폐지해야 한다. 또 준수율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게 준수율 제고 의무를 부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준수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켜지지 않는 규제를 만들어 놓고 법 안 지키는 국민 탓만 하는 관료들의 규제만능주의와 관료주의를 혁파해야 한다.

말씀을 맺으며

한국 경제가 앓고 있는 병은 난치병이지만 불치병은 아니다. 이미 국제기구나 국내외 유명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한국경제를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는지 진단과 처방과 해답이 다 나와 있다. 기업 환경을 개선해서 국내외 투자를 활성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서 국민생활과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면 된다. 개방과 경쟁을 촉진해서 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과 근로자들이 갈라먹고 떼쓰고 우기기 보다는 건전한 생산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면 된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경제문제에 대한 정치논리의 지배, 인기영합주의와 법치주의의 훼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에 다시 충실하면 된다. 병명도 알고 처방도 있다. 약이 쓰다고 안 먹는 것이 문제다. 눈앞의 갈등과 고통이 두려워 꼭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사회는 미숙한 사회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힘든 선택과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과 성숙한 국가지배구조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몇가지

김 정 호 원장
(자유기업원)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투자를 촉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 정책 수단은 금리 인하와 규제완화이다. 금리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 때문에 내리기 어려우며, 오히려 올려야 할 필요마저도 있다. 따라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남은 정책수단은 규제완화이다.

규제완화는 80년대 이후 모든 정권이 내 걸어 온 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규제완화가 필요한 이유는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절차적 규제를 푸는 데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규제완화 핵심이 빠진 것이다. 정말 풀어야 할 규제들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적 규제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규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규제들, 농지의 전용에 대한 규제들,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제한,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들이다.

하나 같이 풀기 어려운 규제들이다. 아니, 정권의 차원에서 보면 풀고 싶지 않은 규제들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을 풀지 않으면 아무리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높여도 알맹이가 빠진 구호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완화는 기술적으로 미조정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 위험하지만 정치생명을 걸고 과감하게 돌파해야 하는 험한 일이라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 송금 자유화 필요

수출을 촉진하는 일도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으로 외화의 유출을 막는 장치들을 제거해야 한다. 수출의 가장 큰 장애는 낮은 환율이다. 그런데 환율은 원화에 대한 외국 돈의 가치이기 때문에 국내에 외화가 많이 있을수록 외국 돈의 가치는 낮아지고 환율은 낮아진다. 외화를 아까워할수록 원화가치는 높아지기 마련이고, 수출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원화나 외화나 모두 똑같은 돈이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외환 정책을 외화를 쌓아 놓는 것에서 환율이 원화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져 한다.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 그 중에서도 특히 외화의 유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들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런 조치들로 인해 외화가 억지로 국내에 머물러 있을수록 원화의 가치는 높아지고, 수출은 어려워진다.

각종 명목의 해외 송금 제한, 조기 유학 허가제, 해외 투자에 대한 제한들을 폐기함으로써 국민들이 풍부한 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원화의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수출을 늘리는 길이기도 하다.

한미FTA는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나라가 세계에 대해서 넓게 열릴수록 경제는 좋아진다.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닫힌 나라치고 잘사는 나라는 없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지금보다 개방의 폭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하며 그것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FTA이다. 가능한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해서 우리의 수출 시장을 넓히고 수입시장도 넓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는 늘고, 일자리도 늘 것이다.

수입시장을 넓히면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나라라는 오명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한미FTA이지만 미국과의 FTA뿐만 아니라 FTA를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아시안 등 모든 나라들로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반대가 덜할 수도 있다. 미국과의 FTA는 이념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더욱 어려운 것 같다. FTA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의 문제는 FTA를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와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

최대한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하려면 경제에 대한 철학을 바꿀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FTA를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런데 경제주권이란 결국 정치논리로 경제 문제를 재단하는 힘을 말한다. 경제주권 대신에 소비자주권이라는 개념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경제주권은 정치적 개념이고 소비자주권은 경제적 개념이다. 경제주권을 지키려다보면 소비자주권은 희생되기 마련이다. FTA 시대에는 소비자주권의 이념을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

대선승리를 위한 경제살리기 대토론회

김영배 상임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프리젠테이션 - 김영배]

경제 재도약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발전전략

안 순 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I. 문제의 제기

- 올해 대통령선거의 시대정신은 ‘경제’라고 말하고 있음.

- 이는 사교육비, 집값폭등, 청년실업, 노후불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절규에서 나온 것임.
-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권자들의 지지후보 선택 시 고려 사항 중 1순위는 경제회생의 비전과 능력이 있는가에 있음

-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내외 경제활성화 방안 및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따라서 정당이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수렴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이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도 거기에 있을 것임.

- 그러나 대선은 기본적으로 미래에의 비전 혹은 시대정신을 두고 벌이는 한판 대결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구체적인 경제활성화 방안과 실천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나 논의의 우선 순위는 국정운영의 이념과 패러다임의 기본원칙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데서 출발해야 함.
- 국정이념 및 정책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안된 상태에서 득표만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급급할 경우 잡탕식 혹은 백화점식 정책 제시가 되거나 상충되는 정책을 놓고 스탠스가 오락가락하여

유권자들에 대한 호소력이 떨어 질 수 있음.

- 본 논문은 경제회생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먼저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국정이념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제도약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살펴보고자 함.

II.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국정이념

□ 차기 정부가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그동안 경제가 잘 돌아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

- 참여정부에서 경제가 순항하지 못한 것은 분배, 평등, 균형개발 등의 이념에 집착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모든 국민과 지역을 골고루 잘 살게 하겠다는 이념 자체의 취지는 좋으나 정책시행 과정에서 보-혁, 성장-분배 등 이분법적인 이념공방과 계층간·지역간 분열과 대립을 유발하여 국력을 결집하지 못하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킴
- 도덕주의적 시장경제관은 총액출자제한제 등 과도한 대기업규제 및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나타나 투자위축을 초래
- 유럽복지모델을 모방한 국가주도형 복지확대정책이 우리나라의 전통 및 경제발전 여건과 괴리되는 측면이 있음
- * 일본과 중국, 인도 등의 틈바구니 속에서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고율의 세금부담으로 성장동력을 훼손할 수 있는 유럽식 복지모델을 시행하기는 큰 부담
- * 자기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유교적 가족 복지 전통이 강한 국민정서와 부조화
-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오히려 수도권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도권과 지방 주민의 재산·소득 격차 확대시킴으로써 사실상 실패. 경직적인 수도권규제는 대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역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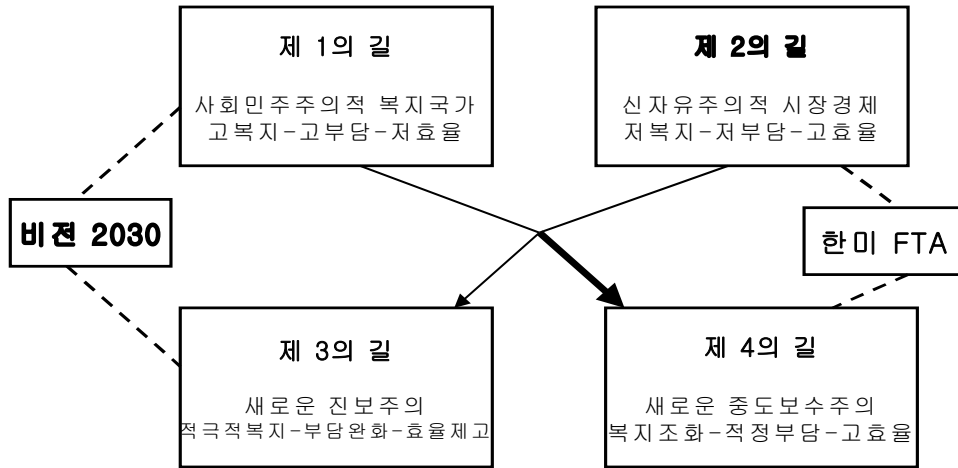
- 대기업은 지나치게 규제하면서 노동자는 보호하는 등 노사관계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해 노사불안을 초래했으며, 이는 외자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저해

□ 경제회생을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은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시작되어야 함

- 경제회생을 위한 정책은 복지조화형 성장중시정책이 바람직하며, 이는 성장-분배, 시장자유-정부개입 등을 둘러싼 국가발전 패러다임 발전 과정상 「제4의 길」(혹은 「새로운 제3의 길」)로 명명할 수 있음

- 제1의 길: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고복지-고부담-저효율
- 제2의 길: 영미식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저복지-저부담-고효율
- 제3의 길: 1990년대 유럽중도좌파정권이 분배중시형 경제노선에 신자유주의 요소를 접목한 노선,
적극적 복지-부담완화-효율제고
- 제4의 길: 복지조화형 성장중시정책으로 중도보수정당이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의 기본틀에 유럽복지모델의 요소를 일부 접목하는 실용적 노선, 복지조화-적정부담-고효율

<경제회생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

- 제1의 길은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버리고 있는, 가지 않아야 할 길
- 제2의 길은 외환위기 후 한국경제의 개혁과정에서 이식된 영미식 주주중심 자본주의의 노선으로,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적지 않은 길.
 - 기업지배구조개선, 주주중심 경영, 노동시장유연성 확대 등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경영투명성강화 등에 일정 성과를 거둠
 - 경영권불안, 단기성과위주 등에 따른 한국특유의 기업가정신 약화,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
- 제3의 길은 유럽의 중도좌파정권들이 복지병 해결을 위해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때 적용한 복지개혁의 이념

- 제3의 길은 복지감축과 노동시장유연성 확대에 성공한 나라일 수록 더 큰 성과를 거둠
- * 영국에서는 블레어 노동당 정권이 보수당의 대처총리가 영국병 치유를 위해 추진했던 신자유주의적 개혁노선을 승계하여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한 결과 영국 경제가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
- * 독일의 쉬뢰더 사민당 정권은 독일병치유를 위해 복지축소, 노동시장 유연성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젠다201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권기반 약화로 퇴진했으나 좌우연정인 메르켈 정부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 프랑스는 지난해 제한적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반대시위 격화로 노동시장개혁에 실패한데다 비대한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에 성과에 없어 경제회생에 발목이 잡힘
- 참여정부는 유럽식 복지모델을 추구하는 「비전2030」로 상징되는 분배중시형 동반성장정책을 시행하면서 한미FTA 협상도 추진함으로써 제3의 길을 염두에 둔 듯한 인상을 줌

- 제4의 길은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정책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으나 글로벌화 대응에 미숙하여 외환위기를 겪은 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부작용과 유럽식 국가주도형 복지체제 도입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할 길

- 경제운영은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개방과 경쟁 촉진으로 국가경쟁력 극대화
- 근로무능력자에게 유럽식으로 국가가 기초생계를 보장하고 패자에게 재시합에 나갈 수 있게 하는 사회안전망 제공
- 작고 효율적인 시장친화형 정부

-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통일비용을 준비하고 중국, 인도, 일본 등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

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성장중시형 경제정책을 쓸 수밖에 없음.

- 다만, 양극화 심화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 인적 자본의 악화 등을 막고 인적·사회적 자본 고도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서는 성장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지정책을 병행 추진

III. 재도약을 위한 국가발전전략

□ 새로운 도약의 목표와 이념

- 새로운 도약의 목표는 7년 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일류국가에 진입하는 것임

- 국정이념으로 제4의 길, 즉 새로운 실용적 중도보수주의로 패러다임 전환

- 제4의 길의 3대 요소는

- 복지조화: 성장잠재력확충과 조화를 이루는 복지 확대
- 적정한 국민부담: 서민생활안정과 성장동력을 훼손치않는 세금 부담
- 높은 효율: 높은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

- 이들 3대 요소가 지향하는 중간 목표는 중산층 복원과 성장동력 확충임.

- 중산층 복원은 성장을 통한 복지로 가능
- 고효율은 성장동력 확충으로 달성할 수 있음
- 과중한 생활비 및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부담 속에 복

지를 향유할 수 있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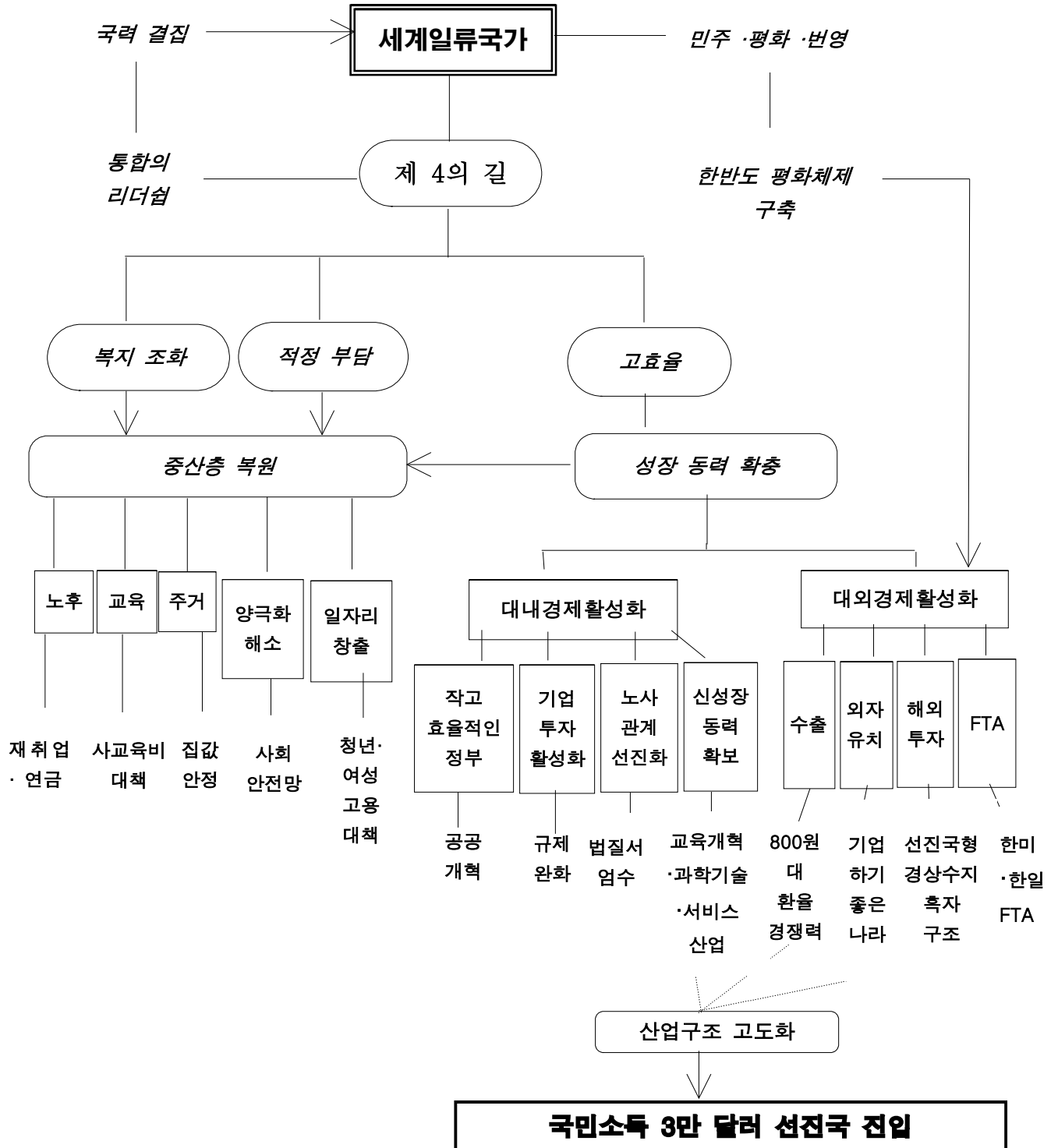
- 중산층의 과중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장동력 확보로 성장률을 높여야 함

□ 중산층 복원과 해결과제

-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양극화해소와 함께 주거, 교육, 노후 불안을 해소해주어야 함

- 일자리창출에는 규제완화, 기술개발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나 청년, 여성, 장노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시행도 필요함
- 저출산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중 하나이며, 이 문제 해결에는 청년층이 결혼할 만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중요함
- 여성고용 확대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일환으로 양성평등, 출산친화형 기업문화형성 등 사회문화적 장애요인 해소 등과 병행하여 추진
-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장률이 높아져야 하며 사회안전망 구축도 동시에 시행되어야 함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



- 주거안정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계층간·지역간 갈등과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집값폭등에 대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신중한 해법이 요망됨

- 울들어 집값은 하락세로 반전했으며 부동산발(發) 경기침체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된 부동산중과세제가 지난해 오히려 집값 폭등을 촉발했으나 신도시개발, 분양원가 공개 등과 함께 금리인상 및 부동산담보대출 억제까지 시행되어 버블세븐을 중심으로 하락세로 반전
- 일본처럼 뒤늦게 금리인상, 부동산담보대출 억제 등 돈줄죄기가 과도하여 자칫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위험성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
- 집값안정은 기본적으로 고급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확대로 해결해야 하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도 공급확대로 전환하는 정책변화를 보임
- 이런 가운데 버블세븐지역의 중대형아파트 매물 확대를 겨냥한 부동산세제 개편 공약은 신중해야 할 것임.
- * 이는 점차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자칫 좋지않은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음.
-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상향조정(예, 6억원→9억원)은 집없는 서민의 분노를 촉발할 수 있음
- * 장기보유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혹은 1주택소유자에 대한 2~3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조치가 반드시 버블세븐의 매물 확대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음. 오히려 부유층에게 특혜를 준다는 여론의 화살을 자초할 위험성도 없지 않음
-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공약들이 나올 경우 집값이 다시 불안해져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위험성이 있음
-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은 집값안정을 해치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 중산층 가계에 대한 또 다른 압박 요인인 과도한 사교육비는 교육 개혁으로 해결

- 교육개혁은 3불(不) 정책(본고사, 기여입학, 고교등급제 금지) 전면재검토, 교사성과급제 확대 등 경쟁체제 도입에 의한 교육의 질 향상을 추진
- 서비스수지 적자의 최대 요인인 과열 조기유학은 경쟁도입에 의한 국내 공교육 질 개선으로 완화 가능

- 노후 불안 해소에는 중장년층의 과도한 사교육비, 주택마련 부담 경감과 함께 재취업기회 확대, 중장기적인 정년연장 추진, 노인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

□ 성장 동력 확충방안

- 세계일류국가 진입과 중산층복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동력 확충이 가장 중요함
- 성장동력 확충의 주역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하며, 기업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함
- 성장동력 확충은 대내경제활성화 방안과 대외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대내경제 활성화 방안

- 대내경제 활성화는 우선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10년 후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함
 - 기업투자 활성화 : ①출자총액제한제, 수도권규제 등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완화 ② 적대적인수·합병(M&A) 노출에 따른 경영권불안 완화조치 ③ 이중대표소송 및 집행임원제

등의 상법 개정안 도입으로 기업가정신 발현을 막는 부작용 시정 ④반시장·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한 홍보 및 경제교육 강화

- 노사관계 선진화 : ①과도한 노동자 보호 시정 ②노사관계법 및 시위관련법의 원칙 및 일관성 있는 적용 및 시행
- 신성장동력 확보 : ① 혁신형 지식기반경제 구축 ② 교육개혁으로 기업이 필요한 적재적소의 인재 및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 ③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금융 및 서비스산업 육성 ④ 독자기술의 확보 및 기술혁신
- 작고 효율적인 시장친화형 정부실현 : ① 과감한 예산절감 ② 공무원수 조정 ③ 공공부문 구조조정 ④ 공기업 민영화 ⑤ 4대 연금 개혁

□ 대외경제 활성화 방안

-글로벌시대의 흐름 속에서 개방과 경쟁촉진에 의한 글로벌화 추진으로 경제 선진화를 달성

- 수출 증대 : 800원대 원/달러환율에도 유지되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가절감과 품질개선
- 외자유치 : 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공백을 메우는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②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투자여건 개선
- 해외투자 : 글로벌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은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금융, 자원·에너지, 건설인프라 등 고수익 전략부문에 진출하여 소득수지흑자가 상품수지흑자보다 많게 함으로써 선진국형 경상수지 흑자구조로 탈바꿈
- FTA : 한미FTA에 이어 한·유럽연합(EU) 및 한일FTA를 체결하여 개방과 경쟁을 통한 글로벌화로 경제업그레이드 추진

-800원대 환율에도 견딜 수 있는 수출경쟁력 확보와 신성장동력 확

충을 위한 방안들은 한미FTA 추진과 연계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향

IV. 결론

- 경제회생을 위해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은 자유주의 시장경제확립의 토대 위에 복지조화형 성장중시정책을 추진하는 제4의 길임.
- 이념 및 계층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여 국력을 결집해야 한 국민의 역동성이 소생함으로써 경제가 살아나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음.
- 국정이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대내외 경제활성화 방안들을 적극 실행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가 나와야 경제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경제살리기를 위한 5대 국가대혁신과제

곽 창 규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경 제 학 박 사)

1. 민생경제 살리기의 첩경은 정권교체

□ 2007년 대선의 의미: ‘희망 대한민국’의 원년

- 2007년 대선의 의미는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선진한국으로의 도약이나 남미제국(諸國)으로의 추락이나”의 선택
 - 역사적으로 보면 건국 20년(60년), 산업화 20년(40년), 민주화 2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선진화시대 20년’인 “희망 대한민국 (New Hope, Korea)”의 원년을 여는 선거
 - 또한 ‘IMF 10년-잃어버린 10년’을 청산하고 선진국 진입의 ‘마지막 기회’의 창’인 “재도약의 10년(Jump up, Korea)”을 여는 선거
 - 2007년 정권교체를 통한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창출하고 내년 “선진정부”를 출범시켜 국민대통합과 국가대혁신을 추진하여 국가의 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경제살리기의 지름길

□ IMF 10년의 평가: 잃어버린 10년

- IMF 10년은 DJ 및 노무현 정권의 좌파주의, 인기영합주의로 인한 정책실패, 정치실패로 총체적 국가위기를 초래한 “잃어버린 10년”
 - ※ 1997년 IMF위기: 외환위기, 경제위기
 - ※ 2007년 총체적 국가위기: 국가정체성의 위기, 국가안보의 위기,

민생경제의 위기, 국가경쟁력의 위기, 국민통합의 위기, 국가리더십의 위기

○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글자그대로 외환유동성 위기로 ‘달러’가 부족해 생긴 일시적인 위기

- 외환위기이후 IMF의 잘못된 정책처방과 DJ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따른 정책실패가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이상의 고통을 안겨줌

- 고금리와 재정긴축, 엄격한 BIS 자기자본비율 8% 적용 등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맹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극심한 경제침체 (overkill), 기업도산 및 대량실업을 초래함으로써 외환위기가 최악의 경제위기로까지 발전

- 또한 위기극복과정에서 냉탕온탕식의 각종 정책남발과 정책실패에 따른 소위 ‘3대 거품’(벤처 거품, 카드 거품,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되고 민생경제가 파탄에 직면

- 나아가 지난 10년간 좌파주의와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미래성장동력과 민간활력이 상실되고 “저성장-고실업” 구조의 덩어리에 빠졌으며, 급속한 기존질서의 파괴와 해체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심화

□ 노무현 정권 4년의 평가 : 총체적 국정실패

○ 총체적 국정실패 : 국정파탄, 민생파탄

- 지난 4년간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서 총체적 국정실패로 인한 국정파탄, 민생파탄을 초래

- 특히 이념과잉으로 인한 정치불안, 안보불안, 민생파탄, 성장동력과 민간활력 상실, 사회불안,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 상실 등을 초래

○ 民心은 天心 : 정권교체는 당연

- 국정은 “한풀이 장”, 대통령은 ”나홀로 대통령“, 나라는 ”아수라장“으로 전락
- 국정문란으로 인한 민심이반 현상은 소위 노무현 디스카운트(discount) 현상, 노무현 메신저(Messengers) 거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면 현 정권의 국정실패로 인한 민생파탄, 국정문란에 대해 국민들은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함
- 특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고 사는 문제’(일자리, 주거, 교육 등)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민심이반과 정권교체는 당연

2. 경제살리기를 위한 인식전환

□ 정책수단의 선택이 10년을 좌우

- 경제정책은 비록 정책목표가 같더라도 시대상황에 따라 국가이념이나 가치, 정책수단에 의해 차별화되고 그 결과는 천양지차
- 기본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나 가치, 정책기조는 단순히 이분법적인 선악(善惡)의 개념이 아닌 선택(選擇)의 문제
- 그러나 양쪽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공정, 경쟁, 책임임

※ 보수 : 자유, 개인, 시장, 효율, 성장, 개방, 선택과 집중
진보 : 평등, 집단, 정부, 평형, 분배, 폐쇄, 균형

- 현 시대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충돌할 때에는 보수의 가치를 우선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진보의 가치를 구현할 때에도 그 수단이나 방법은 가능한 한 보수의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서 국가생존을 위해서는 ‘공정, 경쟁, 책임’을 기반으로 성장 우선, 시장 지향, 개방 추구 등의 선택은 불가피

□ 성장 vs. 분배

- 성장이 분배문제를 해결하며, 성장 없는 분배는 사상누각이라는 인식이 필요
- 지속적인 성장만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분배문제도 해결
·성장→일자리 창출→소득 증대→소비 증대→성장 확대
·성장→세수(재정) 확대→복지·사회인프라 확대→삶의 질 향상
- 특히 저성장과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는 성장이 중요하며, 분배를 위해서도 성장을 해야 함
- 성장을 통해 ‘괜찮은(decent)’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일자리 자체가 최고의 복지임
- 「성장-일자리-복지」라는 선순환의 첫 시발점은 성장

□ 시장 vs. 정부

-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으며, 정부실패가 시장실패보다 더 광범위하고 해롭다는 인식이 확산
- 「큰 시장 - 작은 정부」가 세계적 추세이며, 이를 위해 정부개혁, 감세, 규제혁파 등이 중요
- 정부는 ‘배고픈’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배아픈’ 문제는 시장에 맡김
- 정부의 역할은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실패자에 대한 재도전과 패자부활의 기회 제공, 경제·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등에 국한
- 정부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하면 강압적 개입보다는 시장친화적 개입, 직접적 개입보다는 간접적 개입으로 전환

□ 개방 vs. 폐쇄

- 글로벌 시대에서 개방은 선택이 아닌 국가생존의 필수라는 인식이 중요
- 지금까지 우리경제는 시대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방화 전략을 잘 추진하여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도달(수출주도형 발전전략, OECD 가입, WTO 가입 등)
- 이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여 우리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함
- 한편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는 위상과 역할을 제고

하여 글로벌 차원의 문제나 국제적 구호활동 등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성숙한 국제시민 의식이 필요

□ 공공의 이익 vs. 집단의 이익

- 집단의 이익이 공공(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됨
-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분출되고 있는 각종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를 조정하여 국민적 단합과 공공체로서의 합의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
- 그러나 집단의 불법·폭력시위에는 법과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집단의 불법과 폭력 시위로는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인식의 확립이 필요

3. 경제살리기를 위한 5대 국가대혁신과제

(1) ‘작은 정부’를 통한 정부경쟁력 강화

- 정부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여 ‘경쟁력 있는’ 정부 실현 및 수준 높은 대국민서비스 제공
- 공공부문의 기능 및 조직의 전면적 개편
 - 중앙정부 부처 1/2 축소 : 차기정부 1년내 추진
 - 공무원 정원 축소 : 매년 5%씩 5년간 25% 단계적 축소
 - 공기업 반줄이기 : 5년내 민영화 단계적 추진

(2) ‘큰 시장’을 위한 규제혁파

○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 「규제개혁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네가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원칙 허용, 예외 규제)의 전면적 도입, 규제일몰제(sunset clause) 도입, 규제실명제 도입, 규제개혁추진기구의 권한 및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규제혁파를 추진

○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

- ‘규제와 보호’ 위주의 공정거래법을 ‘자율과 경쟁’의 「기업경쟁촉진법」(가칭)으로 대체
- 특히 대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

○ 기업투자 활성화

- 시중의 막대한 부동자금과 기업의 현금성자산을 산업자금화하여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투자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
- 이 법안에는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 규제들을 일괄적으로 폐지 내지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

(3) 법과 원칙에 기초한 합리적 노사관계 확립

○ 불법·폭력파업과 부당고용행위의 척결

- 노조의 불법·폭력파업 및 정치파업과 기업의 불법·부당한 고용 행위 등의 척결을 위해 법과 원칙에 기초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공권력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
- 특히 불법·폭력파업으로 인한 파업피해 보상구제를 위해 「노동위원회법」에 파업피해시민 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보호 요청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을 도입

○ 노조의 책무성·투명성 제고 및 사회적 책임성 강화

-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일반 국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들이 행정관청이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면 행정관청은 이에 응하도록 함
- 「노동위원회법」에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자료를 해당 노동조합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4) 교육개혁을 통한 인재양성

○ 사립학교에 대한 고교평준화 폐지

- 사립학교는 준칙주의에 의한 특목고, 자립고 등을 확대하여 고교평준화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생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수행
- 공립학교는 현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돈이 없어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안전망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

- 기술·전문계 학교는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원과 연계하여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
- 초등학교는 취학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변경(유치원 1년을 초등학교에 포함)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

○ 사립대학에 대한 3不정책 폐지

- 사립대학에 한해 3不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폐지하여 학교의 학생선발권,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
- 국·공립대의 경우 기존 정책을 유지하되 교육시장과 인재양성의 실패영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강화
- 취약계층 흡수,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대학간의 경쟁에서 소외된 학문영역(기초학문, 기초과학, 미래산업 등) 주도 등의 역할을 수행

○ 권역별 초일류 대학 육성

- 지방대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권역별로 1~2개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갖춘 다양한 초일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초일류대학육성을위한특별법」(가칭)을 제정
- 전국의 국·공립대학을 권역별 연합대학체제로 개편(일종의 미국 주립대학시스템 도입)

(5)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방경제살리기

○ 권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구축

- 전국을 인구 500만~1000만 내외로 8개 광역경제권 구축하여 권역별 특성을 갖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

※ 8개 자립적 광역경제권: 서울권(서울특별시), 경기권(인천, 경기 남부), 강원권(강원도, 경기북부),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영남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

- 실효성 있는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해 「광역경제권구축에관한특별법」을 제정

※ 이 법안에는 지역발전청(지역발전기구) 설립, 지역 경제·산업 관련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의 지방이양, 지역개발계획권 및 토지이용권 부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지역발전협약 체결, 자치단체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지원,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 육성, 광역클러스터 구축, 권역별 다양한 특구 지정,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자금 지원, 지방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권역별 지역구조조정 기금 조성 및 선별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

○ 광역경제권을 광역자치도로 전환

- 향후 행정조직/구역/계층의 전면적 개편을 통하여 현재 「1특별시-6광역시-9도」의 광역행정체제를 광역경제권에 맞추어 「1특별시-6자치도-1특별구」의 형태로 전환

M E M O

M E M O

M E M O

M E M O

M E M O
